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조진만·최준영
(인하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의 정립
- III. 연구모델과 조작화
- IV. 경험적 분석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궐선거)¹⁾를 대상으로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재·보궐선거가

* 본 논문은 2011년 한국시민윤리학회와 동의대학교 선거정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선거와 시민참여”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 대하여 세심한 지적과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사유와 발생시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재선거는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을 때, 당선인이 없을 때,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실시된다. 반면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원 또는 결위가 생겼을 때 실시된다. 하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모두 보완적인 차원에서 정치인을 재충원(replacement)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갖는 정치적 특성과 의미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이하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재·보궐선거의 과정과 결과상에 나타난 차이점들에 주목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연구들은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강원택 2004; 박명호 2006; 신두철 2007; 유진숙 2009; 이상묵 2008; 조진만 1998; 2005; 2009;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진영재·조진만 2002). 이 때 이와 같은 기존 논의들의 기저에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정치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선거결과가 미치는 정치적 파장은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투표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전국선거의 결과와 비교하여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때 논리적으로 보면 전국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들은 재·보궐선거 내의 정치적 비중 차이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재·보궐선거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실시되는가에 따라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재·보궐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실시되거나 동시에 많은 곳에서 실시될 경우 그 정치적 비중은 여타 재·보궐선거보다 크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는 유권자의 참여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재·보궐선거의 과정과 결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내부적인 동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지만 재·보궐선거 내에서의 투표율은 매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당 후보의 승패 여부를 놓고 볼 때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의미를 좀더 적실성 있게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 내부의 특징과 동학을 고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선거 과정과 결과상의 특징들이 재·보궐선거 내의 정치적 비중이 차이를 보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지,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국선거를 얼마나 앞두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지를 통하여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투표율과 여당의 승리 여부로 파악되는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의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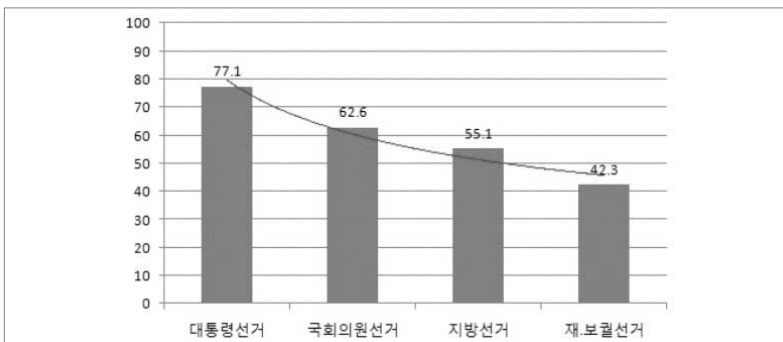
재·보궐선거는 선거사유가 발생한 특정 선거구(들)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이유로 재·보궐선거는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정치적 중요성 내지는 파장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 때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의 작은 정치적 비중은 실제 선거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정치참여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비중이 큰 선거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수단과 자원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동원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Cox and

Munger 1989). 또한 매스미디어의 경우에도 정치적 비중이 큰 선거에 대한 보도와 소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비중이 큰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비중이 큰 선거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아래의 <그림 1>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정치적 비중이 큰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 그리고 전국선거 내에서도 그 정치적 비중에 따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순으로 평균 투표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목격할 수 있다.³⁾

<그림 1>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투표율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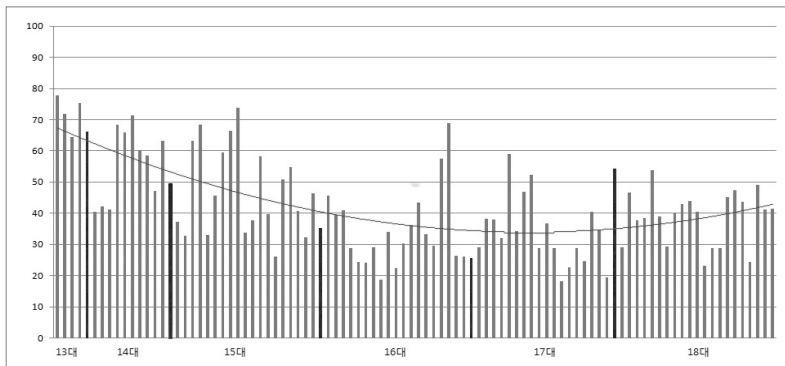


2) 정치적 비중 이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공휴일 문제가 있다. 전국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전국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이러한 차이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확하게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분명하게 재·보궐선거가 공휴일로 처리되어 실시될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에 비용을 덜 지불해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유권자들이 재·보궐선거가 공휴일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투표 참여보다는 다른 여가활동을 즐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험적 근거 없이 재·보궐선거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실시되면 투표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의를 요구한다.

3)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구성되는 의회와 달리 대통령은 개인적 차원에서 승자독식적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하지만 문제는 아래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재·보궐선거 내의 투표율은 사례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2>를 보면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그리고 17대 국회부터 아주 조금씩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 투표율 변화의 추세 속에서도 각각의 재·보궐선거 사례들의 투표율은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정치적 비중의 차이로 인하여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보궐선거 내에서도 각각의 재·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비중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처럼 투표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재·보궐선거 내에서도 정치적 비중이 큰 재·보궐선거의 경우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와 비교하여 정당의 동원활동, 매스미디어의 보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인식 등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변화



국민들로부터의 보다 직접적인 인지와 지지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Kernell 1977; Pierson 1975).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인으로서의 대통령이 많은 권력과 책임을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선거보다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 비중의 문제는 전국선거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 내의 투표율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재·보궐선거가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처럼 재·보궐선거 내에서도 정치적 비중의 차이에 따라 투표율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투표율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정립할 수 있다.

• 연구가설 1: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투표율이 높다.”

다음으로 재·보궐선거의 결과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은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에서 다른 투표행태를 보이게 된다. 정치적 비중이 큰 전국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그 정당의 최근 행태와 성과 등에 대하여 일정 수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정당 지지나 기권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 같이 정치적 비중이 큰 전국선거에서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 철회나 기권을 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감수해야 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와 비교하여 매우 크기 때문이다(Buchanan and Tullock 1962; 강원택 2004). 그러므로 유권자가 전국선거와 같이 정치적 비중이 큰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행태나 정책적 성과 등에 일정 수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지를 철회하거나 기권을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작기 때문에 유권자는 선거결과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투표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유권자가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들을 좀더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 인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실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대통령과 여당이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과 책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주로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투표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Kernell 1977; Pierson 1975; 가상준 2005;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다시 말해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난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 이후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해왔는가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재·보궐선거는 지역 선거구 차원에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선거시점 대통령과 여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적 지표(political barometer)가 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Butler 1949; Kay 1981; King 1968; Lewis 1943; Mughan 1986; 1988; Studlar and Sigelman 1987).

둘째, 대통령과 여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집권 초기 밀월기간의 기대심리와 단기적 성과로 인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상승하였다가 이후 기대심리의 미충족과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Ostrom and Simon 1985; Sigelman and Knight 1985~1983; Stimson 1976; Stray and Silver 1983). 다시 말해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낙선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시점에서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이에 유권자들이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에서 회고적인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⁴⁾

4)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선거가 없는 해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항상 고전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고,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작은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을 회고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 있다(Abramowitz et al. 1986; Campbell 1985; Erikson 1988; Hinckley 1967; Tufte 1975).

아래의 <표 1>은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들의 결과를 여야 의석교체율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당은 26곳(27.1%)에서 승리하고, 야당은 70곳(72.9%)에서 승리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당은 이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한 44개 재·보궐선거구 중 단지 9곳(20.5%)에서만 승리를 한 반면 야당은 이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한 52개 재·보궐선거구 중 35곳(67.3%)에서 승리하여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였지만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선거구는 35곳인 반면 이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였지만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지역은 17곳에 불과하여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표 1>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의 여야 의석교체율

의석교체	사례수	의석교체율
여당→여당	9	9.4%
여당→야당	35	36.5%
야당→여당	17	17.7%
야당→야당	35	36.5%

이것은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앞서 진행한 논의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시점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 시점들의 대통령 지지율 평균을 산출해본 결과, 그 평균값이 41.4%로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인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비율도 73.6% 달하였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안 되는 낮은 시점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작은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앞의 <표 1>은 전반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당 후보들이 선전한 지역들도 다수 존재하였다는 특징도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여당 후보들이 선전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의 존재라는 두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다만 앞서 논의한 전국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에 따른 외부비용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차이를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 내에서도 정치적 비중의 상대적 차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특정 재·보궐선거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큰 정치적 비중을 갖게 될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정치적 비중이 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과 야당간의 선거경쟁은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결과 정치적 비중이 큰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상호 경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지역 개발과 발전 등과 관련하여 여당이 갖고 있는 각종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이 구축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과 선거결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의 정립이 가능하다.

- 연구가설 2: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III. 연구모델과 조작화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

이를 어떻게 조작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의 고민을 토대로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를 두 개의 변수로 조작화하고 있다.

첫째,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몇 개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가 한 곳에서 실시될 때와 비교하여 여러 개의 재·보궐선거들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관심도와 파급력에 대한 정치권과 유권자의 인식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열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몇 개가 실시되는가의 문제만을 고려하여 정치적 비중을 조작화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내지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러므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여당 또는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아닌 경합적인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다수 실시될 때 클 수 있다.

셋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중요한 전국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실질적으로 향후 선거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당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전국선거에 임박하여 실시될수록 정치적 의미와 비중은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동시에 몇 개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지와 영남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경합적 지역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합하여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선거를 몇 개월 남겨두고 실시되는가를 계산하여 그 수치가 작을수록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를 재·보궐선거 수와 전국선거 기한이라는 두 변수로 조작화한 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회귀

분석 모델들을 토대로 그것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재·보궐선거 결과—여당 후보의 당락 여부—는 여당 후보가 패배하였을 경우에는 0으로, 그리고 승리하였을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다.

● 연구모델 1

$$\begin{aligned} \text{재·보궐선거 투표율} = & \alpha + \beta_1 \text{재·보궐선거 수} + \beta_2 \text{전국선거 기한} \\ & + \beta_3 \text{대통령 지지율 (평균 차이)} + \beta_4 \text{야당 유리 지역주의} \\ & + \beta_5 \text{여당 유리 지역주의} + \beta_6 \text{재·보궐선거 경합도} + \beta_7 \text{이전 총선 투표율} \\ & + \varepsilon \end{aligned}$$

● 연구모델 2

$$\begin{aligned} \text{재·보궐선거 결과} = & \alpha + \beta_1 \text{재·보궐선거 수} + \beta_2 \text{전국선거 기한} + \beta_3 \text{대통령 지지율} \\ & + \beta_4 \text{야당 유리 지역주의} + \beta_5 \text{여당 유리 지역주의} + \beta_6 \text{재·보궐선거 투표율} \\ & + \varepsilon \end{aligned}$$

이밖에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투표율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적실성 있게 분석할 목적으로 기존 연구의 경험적 결과들(조진만 2009;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독립변수들을 어떻게 조작화하였는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⁵⁾ 본 연구의 경우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5) 이 조사자료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님께서는 현재 ○○○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긍정적 대답을 한 응답자의 백분율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시점 이전의 시기에서 가장 근접한 시점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대통령 지지율을 코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평균으로부터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산출한 수치를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보상과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으로 규정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인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조진만 2009). 다시 말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보상과 처벌의 행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거나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은 특징을 보일 수 있다.⁶⁾

둘째, 지역주의 관련 변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열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여당 또는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경합적 선거구의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으로 연구사례들을 분류한 후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경합적 선거구를 기준변수로 지역주의와 관련한 두 개의 가변수—여당 유리 지역주의와 야당 유리 지역주의—를 설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주의 관련 변수를 분류한 기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분류한 기준은 노태우 정부의 경우 3당 합당 이전 대구·경북지역, 그리고 3당 합당 이후 영남지역이다. 또한 김영삼 정부⁷⁾와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중 회귀분석 모델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2차의 다항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Gujarati 1995).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² 변수간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사례들을 토대로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²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상관계수(r)가 .979(p=.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보궐선거 투표율 모델에서 대통령 지지율(평균 차이) 변수를 채택하고 있다.

7) 김영삼 정권 말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지역연합적 선거공조가 진행되어 호남

영남지역을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⁸⁾와 노무현 정부⁹⁾의 경우 호남지역을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호남지역을,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영남지역을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분류하였다.

여당 또는 야당에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할 경우 그 영향을 받아 여당 후보가 당선 또는 낙선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여당 또는 야당에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경합적인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와 비교하여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과 보호의 수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재·보궐선거 경합도는 얼마나 치열하게 선거경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후보자와 정당의 유권자 동원과 매개되어 궁극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Cox and Munger 1989).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 경합도를 차점자의 득표율을 당선자의 득표율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재·보궐선거 경합도 수치가 높을수록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고, 선거경쟁이 경합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에서도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형성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실시된 충남 예산시 재선거의 경우 이 지역출신인 이회창 후보가 경선을 통하여 여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된 직후에 실시되어 여당에게도 유리한 지역연고주의(hometown regionalism)가 구축됨으로써 매우 경쟁적인 선거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예산시 재선거의 경우를 경합적 선거구로 분류하였다.

8) 김대중 정부의 경우 여권의 공조가 파기되기 이전까지 충청지역은 공동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사례들 중 이 시기 충청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없었다.

9) 노무현 정부 시기 충청지역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의 쟁점으로 인하여 여당에게 유리한 소지역주의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충청지역에서 실시된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연기군 재선거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불만, 공주 출신 심대평 충남지사의 중부권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 여당 후보 공천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전반적으로 여당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거구를 경합적 선거구로 분류하였다.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전 총선 투표율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투표율이 이전 총선 투표율과 경로의존(path dependence)적인 관계—이전 총선 투표율이 높을수록 재·보궐선거 투표율도 높음—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독립적 영향력을 적실성 있게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전 총선 투표율을 통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서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Boston 1980; King 1968; Mughan 1986; 1988; Norris 1990). 즉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기권으로 인하여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하나의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IV. 경험적 분석

다음의 <표 2>는 앞서 제시한 연구모델 1을 토대로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분산분석의 결과인 F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야당 유리 지역주의, 여당 유리 지역주의, 재·보궐선거 경합도, 이전 총선 투표율이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조진만 2009)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재·보궐선거 수가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유의확률(p) 0.05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

는 부분이다.¹⁰⁾ 왜냐하면 이것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로 인하여 투표율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표 2〉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β)	유의확률(p)
재·보궐선거 수	-.673	.298	-.178	.026
전국선거 기한	-.020	.149	-.010	.894
대통령 지지율 (평균 차이)	.084	.112	.077	.454
야당 유리 지역주의	7.723	2.828	.213	.008
여당 유리 지역주의	7.390	2.589	.223	.005
재·보궐선거 경합도	.151	.051	.225	.004
이전 총선 투표율	.833	.142	.612	.000
상수	-15.714	8.757		.076
F값	14.160 ($p=.000$)			
결정계수(R^2)	.544			
사례수(N)	91			

이 때 문제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와 투표율간의 관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많이 실시될수록 오히려 투표율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다면 수도권과 같이 경합적 지역에서 하나의 재·보궐선거가 추가적 실시될 경우 그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0.75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 의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들이 가능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와 투표율간의 관계에 대하여 전개한 이론적 논의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

10)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전국선거까지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지만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치적 비중이 큰 선거일수록 정당들간의 선거경쟁이 치열해지고,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많아지며,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 자체에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맥락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의 객관적인 인식과 선거구 차원의 주관적인 인식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한국에서 재·보궐선거는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 속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리전과 총력전을 전개하는 특징¹¹⁾을 보인다(조진만 1998; 2004). 이 때 많은 재·보궐선거들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정치적 자원들을 비교적 고르게 분산시키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정 선거구(들)에 집중시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 때 적은 재·보궐선거들이 실시되어 중앙당의 집중적인 선거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적으로 많은 재·보궐선거들이 실시되어 중앙당의 선거개입이 분산될 경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정치적 비중은 오히려 반감될 수도 있다. 즉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외부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과 실제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부의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보궐선거들이 실시될 경우 매스미디어도 정당간의 경쟁이 집중되어 있는 일부 지역들이나 거물급 인사들이 경쟁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다수의 재·보궐선거들이 동시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11)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시기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한광옥 초대 노사정위원장이 서울 구로(乙) 재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체 270명의 88.1%인 238명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하여 민주당 이만섭 국회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중앙일보 2001/10/26).

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설적 추론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치적 비중이 차이를 보이는 재·보궐선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유권자 개인 수준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정당 의 선거전략이나 매스미디어의 보도행태 등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에 대한 조작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의 차이를 그 수와 전국선거까지의 기한으로 조작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작화는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는 얼마나 많은 수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전국선거와 얼마나 가까운 시점에 실시되었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재·보궐선거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출마하여 선거경쟁을 하였는가의 문제도 중요할 수 있다.¹²⁾ 또한 본 연구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시점에는 다른 지방선거 차원의 재·보궐선거들로 함께 진행된다. 그러므로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인물 관련 변수와 각급 지방선거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조작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향후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를 좀더 다양한 측면에서 조작화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3>은 앞서 제시한 연구모델 2를 토대로 재·보궐선거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난 것이다. 일단 연구결과, 카이자승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적합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모델은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여당 후보의 당락 여부—를 설명함에 있어 79.5%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최근에 실시된 4·27 재·보궐선거의 경우 단 세 곳에서만 실시되지만 경기 분당(乙) 보궐선거의 경우 손학규 현 민주당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쟁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갖는 정치적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표 3〉 재·보궐선거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Exp(β)	유의확률(p)
재·보궐선거 수	.148	.091	1.159	.096
대통령 지지율	.046	.016	1.047	.003
여당 유리 지역주의	.949	.705	2.584	.178
야당 유리 지역주의	-2.836	1.229	.059	.021
재·보궐선거 투표율	.026	.025	1.027	.285
상수	-4.921	1.492	.007	.001
카이자승 -2로그우도 사례수 적중률	23,062 (p=.000) 78,828 91 78.0%			

전국선거 기한은 대통령 지지율과 다중 공선성 문제가 제기되어 최종 모델에서 제외함.

구체적으로 연구결과 재·보궐선거 수, 대통령 지지율, 야당 유리 지역주의가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당 유리 지역주의와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선거 기한은 대통령 지지율과 높은 상관관계($r=.548$, $p=.000$)를 형성하고 있어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연구모델에서 제외시켰다.¹³⁾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와 비교할 때 여당 유리 지역주의가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통계적

13) 전국선거 기한을 포함시킨 모델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은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선거 기한은 유의확률 0.1 이하($p=.090$) 수준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을 제외시킨 모델에서 전국선거 기한은 유의확률 0.01 이하($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국선거에 근접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향이 강화되어 여당이 고전하게 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다만 기존 연구를 통하여 대통령 지지율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국선거 기한과 대통령 지지율간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모델에서 전국선거 기한을 제외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삽입시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재·보궐선거 수라는 새로운 변수가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김영삼 정권 초기 TK정서의 형성과 노무현 정권 시기 호남지역의 정서 변화와 연관이 있다. 김영삼 정권 초기 대구·경북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공직자 재산공개, 정치자금법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등의 강도 높은 개혁과 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실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TK정서라는 반여당 정서가 형성됨에 따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의 경우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였을 때만해도 호남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새천년민주당과의 지역 내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곳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전부 패배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재·보궐선거의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논리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비록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을 적극적으로 보호(protection)한다는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호 기제가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적극적으로 공격(attack)하고자 하는 기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야당 유리 지역주의와 달리 여당 유리 지역주의의 경우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보궐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향이 강하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여당 지지자의 보호 기제와 야당 지지자의 공격 기제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재·보궐선거 수가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다수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수록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수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비중을 갖게 될 경우 투표자—특히 여당 지지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재·보궐선거 수가 많을수록 투표율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성향의 유권자들이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수록 기권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적 비중이 큰 재·보궐선거에서는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정당 선호를 확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비중이 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고려하여 지역일꾼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여당 후보들의 입장에서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야당의 중간평가론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발전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우위를 강조하는 전략이 여당 지지자들을 동원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중간평가를 강조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는 일정 수준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집합자료 수준의 분석으로는 추론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개인적 수준에서 그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V. 결 론

재·보궐선거는 선거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들과 비교하여 정치적 비중이 작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의 작은 정치적 비중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낮추고,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재·보궐선거는 전국선거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실시되거나 동시에 많은 곳에서 실시될 경우 그 정치적 비중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보궐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세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 내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그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들은 재·보궐선거 내의 정치적 비중 차이 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보궐선거 내에서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그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연구결과,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는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오히려 투표율은 낮아진다고 나온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향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좀더 타당성 있는 논리 개발과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와 관련하여 인물과 선거구 특성¹⁴⁾ 등을 고려한 추가적 변수 조작화가 필요할 것

14)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중간평가

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로 인한 정당간 경쟁, 매스미디어의 보도행태, 유권자들의 인식 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다각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연구결과, 다수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비중을 갖게 될 경우 투표자—특히 여당 지지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하여 지역일꾼론을 강조하는 여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다만 이 역시 정치적 비중 차이에 따라 어떠한 성향의 유권자들이 기권 또는 참여하는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지지를 유지하고 철회를 하는지, 차별화된 선거쟁점으로서 지역일꾼론과 중간평가론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분석해야 그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경우 유권자 개인 수준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와 주요 독립변수들의 조작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재·보궐선거 내의 정치적 비중의 차이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관련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추론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해석들이 향후 설문조사자료의 구비와 추가적인 독립변수들의 조작화 등을 통하여 검증될 때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의미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풍성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거구의 이해관계, 후보자의 개성과 매력, 정당조직 우열, 선거전략 등과 같은 선거구 특성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Cook and Ramsden 1973; Feigert and Norris 1990; Norris 1990). 하지만 선거구 특성을 조작화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다소 간과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재·보궐선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선거구 특성을 적절성 있게 조작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논문투고일: 2011년 06월 22일

심사완료일: 2011년 07월 18일

게재확정일: 2011년 07월 29일

〈참 고 문 헌〉

- 강원택. 2004.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제10권 1호: 145-166.
- 박명호. 2006. “재보궐 선거 정치참여에 대한 시론.”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1호: 129-146.
- 신두철. 2007.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2005년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1호: 153-174.
- 유진숙. 2009. “4.29 재보궐선거와 정당: 정당전략적 관점에서의 중간평가 모델의 검토.” 『국가전략』 제15권 4호: 191-218.
- 이상묵. 2008. “4·25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과 정치적 함의.” 『동서연구』 제20권 2호: 197-218.
- 조진만. 1998. “집권정부의 정치적 지지도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김영삼 정권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0권 1호: 159-198.
- _____. 2005.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95-122.
- _____.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2호: 5-34.
-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2호: 75-98.
- 진영재·조진만. 2002.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제시와 사례 분석: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185-202.
- Abramowitz, Alan I., Albert D. Cover, and Helmut Norpoth. 1986. “The President’s Party in Midterm Elections: Going from Bad to Wors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562-576.
- Buchanan, James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 Butler, David. 1949. "Trends in British By-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11: 396-407.
- Campbell, James E. 1985. "Explaining Presidential Losses in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47: 1140-1157.
- Cook, Chris and John Ramsden. eds. 1973. *By-Elections in British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 Cox, Gary W. and Michael C. Munger.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the 1982 U.S.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17-231.
- Erikson, Robert S. 1988. "The Puzzle of Midterm Loss." *Journal of Politics* 50: 1011-1029.
- Feigert, Frank B. and Pippa Norris. 1990. "Do By-Elections Constitute Referenda?: A Four-Country Compariso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5: 183-200.
- Gujarati, Damodar N. 1995. *Basic Econometrics*. New York: McGraw-Hill, Inc.
- Hinckley, Barbara. 1967. "Interpreting House Midterm Elections: Toward a Measurement of the In-Party's "Expected" Loss of Sea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 691-700.
- Kay, Barry J. 1981. "By-Elections as Indicators of Canadian Voting."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 37-52.
- Kernell, Samuel.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Midterm Congressional 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44-66.
- King, Anthony. 1988. "Why All Governments Lose By-Elections." *New Society* 11: 413-415.
- Lewis, E. G. 1943. *British By-Elections as a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 Mughan, Anthony. 1988. "On the By-Election Vote of Governments in Britai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3: 29-48.
- _____. 1986. "Toward a Political of Government Vote Losses in Midterm By-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761-775.
- Ostrom, Charles W. and Dennis M. Simon. 1985. "Promise and Performance: A Dynamic Model of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 334-358.
- Norris, Pippa. 1990. *British By-Elections: The Volatile Elector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erson, James. 1975. "Presidential Popularity and Midterm Voting at Different Electoral Lev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683-694.
- Pollock, James K. 1941. "British By-Elections Between the Wa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5: 607-619.
- Sigelman, Lee. and Kathleen Knight. 1985. "Expectation/Disillusion and Presidential Popularity: The Reagan Experi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9: 209-213.
- _____. 1983. "Why Does Presidential Popularity Decline?: A Test of the Expectation/Disillusion Theory." *Public Opinion Quarterly* 47: 310-324.
- Stimson, James A. 1976. "Public Support for American Presidents: A Cyclical Model." *Public Opinion Quarterly* 40: 1-21.
- Stray, Stephanie and Mick Silver. 1983. "Government Popularity, By-Elections and Cycles." *Parliamentary Affairs* 36: 49-55.
- Studlar, Donley T. and Lee Sigelman. 1987. "Special Elec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 247-256.
- Tufte, Edward R. 1975. "Determinants of the Outcomes of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812-826.

〈부록 1〉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및 투표율 현황:
13대 국회~18대 국회

의회	대통령	선거일	선거구	투표율 (%)	여당 승리 여부
13대	노태우	1989. 4. 14.	강원 동해	77.7	○
		1989. 8. 18.	서울 영등포(乙)	71.8	○
		1990. 4. 3.	대구 서(甲)	64.4	○
			충북 진천/음성	75.2	×
		1990. 11. 9.	전남 영광/함평	66.1	×
14대	김영삼	1993. 4. 23.	부산 동래(甲)	40.4	○
			부산 사하	42.1	○
			경기 광명	41.2	○
		1993. 6. 11.	강원 명주·양양	68.5	×
			강원 철원·화천	66.0	○
			경북 예천	71.3	○
		1993. 8. 12.	대구 동(乙)	60.1	×
			강원 춘천	58.5	○
		1994. 8. 2.	대구 수성(甲)	47.0	×
			강원 영월·평창	63.1	○
			경북 경주	49.6	×
		1997. 3. 5.	인천 서	37.3	×
			경기 수원 장안	32.7	×
		1997. 7. 24.	경북 포항 북	63.1	×
			충남 예산	68.5	○
		1997. 9. 4.	경기 안양 만안	33.1	×
		1998. 1. 6.	광주 동	무투표당선	×
15대	김대중	1998. 4. 2.	부산 서	45.7	×
			대구 달성	59.4	×
			경북 문경·예천	66.3	×
			경북 의성	73.9	×
		1998. 7. 21.	서울 종로	33.7	○
			서울 서초(甲)	37.6	×
			부산 해운대·기장(乙)	58.3	○
			대구 북(甲)	39.8	×

의회	대통령	선거일	선거구	투표율 (%)	여당 승리 여부
15대		1998. 7. 21.	경기 수원 팔달	26.2	×
			경기 광명(乙)	50.8	○
			강원 강릉(乙)	54.7	×
		1999. 3. 30.	서울 구로(乙)	40.8	○
			경기 시흥	32.2	○
		1999. 6. 3.	서울 송파(甲)	46.4	×
			인천 계양·강화(甲)	35.2	×
16대	김대중	2001. 10. 25.	서울 동대문(乙)	45.6	×
			서울 구로(乙)	39.4	×
			강원 강릉	41.0	×
		2002. 8. 8.	서울 종로	28.9	×
			서울 금천	24.3	×
			서울 영등포(乙)	24.0	×
			부산 부산진(甲)	29.1	×
			부산 해운대·기장(甲)	18.8	×
			인천 서·강화(乙)	34.0	×
			광주 북(甲)	22.4	○
			경기 광명	30.4	×
			경기 하남	36.3	×
			경기 안성	43.5	×
			전북 군산	33.2	○
			경남 마산 합포	29.6	×
			제주 북제주	57.6	×
		2002. 12. 19.	울산 중	68.9	×
	노무현	2003. 4. 24.	서울 양천(乙)	26.4	×
			경기 의정부	26.0	×
			경기 고양 덕양(甲)	25.6	×
		2005. 4. 30.	경기 성남 중원	29.1	×
			경기 포천·연천	38.1	×
			충남 공주·연기	37.9	×
			충남 아산	32.0	×
			경북 영천	59.1	×

의회	대통령	선거일	선거구	투표율 (%)	여당 승리 여부
	노무현	2005. 4. 30.	경남 김해(甲)	34.2	×
		2005. 10. 26.	대구 동(乙)	46.9	×
			울산 북	52.2	×
			경기 부천 원미(甲)	28.9	×
			경기 광주	36.7	×
		2006. 7. 26.	서울 성북(乙)	28.9	×
			서울 송파(甲)	18.1	×
			경기 부천 소사	22.6	×
			경남 마산(甲)	28.8	×
		2006. 10. 25.	인천 남동(乙)	24.7	×
			전남 해남/진도	40.5	×
		2007. 4. 25.	대전 서(乙)	34.6	×
			경기 화성	19.3	×
			전남 무안/신안	54.4	×
18대	이명박	2009. 4. 29.	인천 부평(乙)	29.1	×
			울산 북	46.7	×
			전북 완주(甲)	37.8	×
			전북 전주 덕진	38.4	×
			경북 경주	53.8	×
		2009. 10. 28.	경기 수원 장안	39.0	×
			경기 안산 상록(乙)	29.3	×
			강원 강릉	40.3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42.9	×
			경남 양산	43.9	○
		2010. 7. 28.	서울 은평(乙)	40.5	○
			인천 계양(乙)	23.2	○
			광주 남	28.7	×
			강원 원주	28.7	×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45.1	×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47.4	○
			충북 충주	43.6	○
			충북 천안(乙)	24.3	○

의회	대통령	선거일	선거구	투표율 (%)	여당 승리 여부
18대	이명박	2010. 7. 28.	인천 부평(乙)	29.1	×
			울산 북	46.7	×
		2011. 4. 27.	경기 성남 분당(乙)	49.1	×
			전남 순천	41.1	×
			경남 김해	41.5	○

〈부록 2〉 기술통계

항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재·보궐선거 투표율	96	18.1	77.7	42.3	14.8
재·보궐선거 결과	96	0.0	1.0	0.27	0.4
재·보궐선거 수	96	1.0	13.0	5.3	3.6
전국선거 기한	96	1.0	35.0	13.8	7.5
이전 총선 투표율	96	40.5	85.1	59.4	10.7
재·보궐선거 경합도	96	17.9	97.7	69.2	20.2
대통령 지지율	91	8.7	86.5	41.4	22.0
대통령 지지율 (평균 차이)	91	0.3	45.4	17.9	12.4
야당 유리 지역주의	96	0.0	1.0	0.21	0.41
여당 유리 지역주의	96	0.0	1.0	0.17	0.37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전국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선거 과정과 결과상의 특징들이 재·보궐선거 내의 정치적 비중이 차이를 보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지,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국선거를 얼마나 앞두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지를 통하여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투표율과 여당의 승리 여부로 파악되는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는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한국, 전국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투표율

<Abstract>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at the turnouts of re- or by-elections are generally low compared to national elections. In addition,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the candidates of ruling party are frequently facing an uphill battle at the re- and by-elections. These political phenomena occur because national elections and re- and by-elections differ in their political weight in the eyes of the general electorates.

With these findings in mind,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whether or not differences of political weight among re- and by-elections in Korea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turnouts and outcomes. This study measures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weight among re- and by-elections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criteria: 1) How many re- and by-elections took place at the same time? 2) How many re- and by-elections were held at the districts that were not influenced by regionalism? 3) How close from the upcoming national election day when the re- and by-elections took place? Utilizing the aggregate data about the re- and by-elections in Korea since the democratizat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turnouts and outcomes of re- and by-election in Korea vary significantly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ces of their political weight.

※ Keywords : Korea, National election, Re-election, By-election, Turnout, Electoral Outcome